

(제1발표 토론)

기록공동체 신뢰 회복과 외연 확장의 필요성

박 종 연 위원장(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발표에서는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기록관리 종사자의 문제, 새로운 국가기록 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발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발표자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며, 동의에 대한 부연설명과 약간의 반론, 약간의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기록관리 종사자들은 조직이며 인간이다. 두 개의 기록세계에 모두 속한 인격체이며, 그 인격체는 기록세계의 변화와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단, 공감과 실천의 문제는 다른 것일 수 있다. 조직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는 환경을 탓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기록관리 종사자 이중 기록전문가들의 전문성의 문제이다. 전문성의 문제는 단 시일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관리 종사자들 특히 기록전문가를 위해 기록관리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바뀐 토양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토양을 함께 바꿀 수 있게 그들을 기록공동체 속으로 더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둘째 기록관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세워졌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20년을 운영하여 왔다. 그리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또 다시 20년을 운영할 수 있다. 기록전문가는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부인하기도 힘들 것이다. 법이라는 규율 속에서 제도가 사회 관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관념이 '기록관리를 기록행정'으로 귀속 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행정을 우선 무너뜨리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1999년 체계, 2007년의 체계의 붕괴가 새로운 아카이브 건설 위한 것이라며, 과감하게 부정하고 돌아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 지방 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종사자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셋째, 기록전문가들은 기록이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기록의 인구구성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의 역할까지 영역이 확장되었고,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이제 공공 영역의 전유물이 아

닌 시대가 되었다. 기록 소비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몇 년 전 ‘서태지 아카이브’¹⁾가 기록공동체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불과 몇 주 전에는 ‘BTS의 기억 저장소, 아미피디아(ARMYPEDIA)’²⁾가 또 다른 아카이브의 모습을 알려왔다. 소비자들은 이제 공공영역의 아카이브를 즉각적인 소비재로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기억을 자신들의 규범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기록관리는 이들을 제도권 밖의 우리와 다른 것으로 치부하고 가야하는가. 공공 기록관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넷째, 기록학에도 경영학 마인드는 필요하다. 기록관리는 기록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고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니즈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즉, 기록생산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고 관리 단계를 효율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록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록관, 아카이브는 경영되어야 한다. 단 윤리경영이 실천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난 10년간 부족했던 윤리경영이 ‘전문성’이라는 과제의 실현, 토양의 설계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1, 2발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국가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의 수립 또는 변화를 위해서 ‘국가기록원이 지향하는 방향성(=가치=사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기록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접점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전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기록공동체에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행정은 언제나 선순환 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패란 없으며 과정의 어려움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었다. 기록관리도 지난 20년간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그리고 발제자의 말처럼 지난 10년 ‘적폐의 시간’이라는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실패와 좌절을 국가행정의 선순환으로 애써 포장하려 할 필요는 없다. 실패와 좌절을 발판 삼아 외연의 확장을 꿈꾸는 것이 어찌 보면 기록공동체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는 아닐까.

1) 서태지 매니아가 만든 디지털 기록 보관소, <http://www.seotaiji-archive.com/>

2) 아미피디아는 방탄의 강력한 팬덤인 아미(Army)와 위키피디아의 약자로 전 세계 7개 도시와 온라인을 연결하는 일종의 거대한 증강현실 게임과도 같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체 구성원이 정해진 룰에 따라 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 기록을 생산하고 공동의 기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armypedia.net/about.jsp>

(제2발표 토론)

국가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 확인을 위한 기록관리 방향성

박종연 위원장(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공동체는 실재(實在)하는가? 기록공동체는 왜 필요한 것인가? 기록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실재 여부는 조직적 실체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문제다. 필요성은 기록공동체가 나(개인)와 공동체 내 세분화 된 집단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를,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명쾌하지는 못하지만 한 쪽 구석으로는 불편한 답을 내려한다. 그래야만 ‘국가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기록공동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록공동체는 실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실재하지는 못한 공간일 것이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약 2,000여명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기록관리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매년 약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기록공동체의 시작점인 교육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이들 모두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은 아니다. 사실 기록전문가 2,000명과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 ‘기록공동체’라는 존재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공동체는 실존하는 공간이지만 실재하지는 못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실재와 연관한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한다. 각급 기록관은 국가기록원에 의해 수립된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이 이해충돌을 해소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한다. 즉 기록공동체는 이해 충돌 과정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기록관리법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된 ‘피동적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이해 충돌을 해소 또는 조율, 문제제기 등의 역할을 한다. 국가기록원, 기록관, 학교(연구자, 학생) 등 기록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피해가 최소화 되는 선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무엇이 긴장관계를 만들었는지를 잊게 만든다.

위의 대답들에 일면 동의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이견이 더 많을 것이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 오히려 정답일 것이다. 기록공동체는 내부의 이해관계와 갈등만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기록공동체의 구성원인 기록전문가는 ‘사회 전반의 기록문화를 증진하고 조직과 개인의 기록화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³⁾라고 역할에 대한 반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기록전문가와 기록공동체는 ‘기록의 가치를 수호하여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한다.’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에서처럼 기록전문가와 ‘기록공동체는 전문가로서 열린자세와 자기성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할 수 있다.

모두 반박하기 어려운 관념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목표(목적)이 빠졌다. ‘기록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록관리가 국민(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서부터 국가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과 기록공동체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기록관리제도의 개편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의 개선이 기록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가기록관리 중장기발전전략도 이관 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역사의 전승,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20년 전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 제도의 문제, 업무의 문제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기록관리가 무엇이라고, 기록관리가 우리 삶에 어떤 편익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기록관리 제문제에 대한 해결이(중장기발전전략)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선형적으로라도 국가기록관리(또는 공공기록관리)가 무엇이며, 기록관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진다. 소비자의 무관심은 회사를 망하게 한다. 기록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기록공동체의 역할 또한 재논의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재원 마련을 위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원대한 포부를 품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달성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과제와 목표는 TNA를 위한 벽찬 미래를 가 키고 있다. 우리와 함께 가자.”⁵⁾

3) 「한국기록전문가 윤리강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

4)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선언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0.

5) 『해외 내셔널 아카이브즈 전자기록관리 전략 자료집』,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8, 68p.